

#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요자본량 추정

최광석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은 가까운 기간내에 다가올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상황이다. 통합시점까지의 남북한 경제교류나 협력 정도, 통합시의 가격자유화나 사유화와 관련된 재산권의 재확립 그리고 참여 및 분배제도, 사회보장제도와 관계있는 통합이후 새로운 체제의 선택,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거시경제정책 등에 따라 남북한 경제통합의 성패가 결정되고 이는 또한 미래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넓은 의미에서 통일비용의 추정과 관련하여,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사항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통일비용의 양적 추정은 정치적인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통합시점에서의 북한의 자본붕괴나 인구이동을 모형내에 도입하고,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제유형의 단계적 통합방안과 상응하는 필요자본량 추정의 새로운 방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실증분석은 통합이후 남북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필요자본량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1. 단계적 통합방안에 대한 논의

독일에서의 경제통합은 구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일시적 붕괴와 서독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소위 흡수통일로 특징지어진다. 최근에는 독일에서의 이와 같은 통합방안에 대한 많은 경제적, 정치 사회 심리적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한반도에서의 경제통합은 독일식의 흡수통일보다는 단계적인 통합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현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이나 경제적 의미에서의 연방제적 통일방안 그리고 북한지역의 일시적 붕괴를 가정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합하기 보다는 한시적인 준비기간을 가진 후에 통합하자는 경제특구가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체로 통합이후의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액 조달의 재정지원능력을 지니고 있고, 통합이전의 정치 사회적 통합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상황하에서의 독일의 흡수통합이 통합이후 많은 재정적자와 경기회복의 지연 그리고 정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통합의 경우 경제력 격차가 독

일통합 당시 보다 크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남한측의 충분한 재정지원 능력이 부족하며 더욱이 체제의 이질요소가 심한 한국의 경우 흡수통일보다는 단계적 통합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현정부의 3단계 3기소 통일방안, 경제적 의미의 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지역의 한시적 경제특구가설 등 재유형의 단계적 통합방안과 상응할 수 있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3단계 구분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II. 남북한 경제통합의 3단계

### 1. 시점의 구분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경제교류 및 협력단계, 경제지원단계, 균형지역개발단계 등의 3단계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완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우선 기준시점, 법적 제도적 통합시점, 중간목표시점, 경제통합 완성시점 등의 4가지 시점을 구분하기로 한다.

첫째, 기준시점이란 현재의 시점을 말하지만, 실증분석에서는 남북한의 경제에 대한 최근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상정할 것이다.

둘째, 법적 제도적 통합시점이란 남북한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경제통합을 공표하는 시점을 말한다. 소유권과 조정기구 양면에서 모두 부분적인 제한이 가해진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북한경제가 소유권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조정기구면에서는 시장조정기구를 채택하는 시점을 말한다(이하에서 통합시점이라고 표기).

셋째, 중간목표시점이란 경제통합이후 구조조정기간의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공표하고 짧은 기간내에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의 수준과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비용이 남한측의 지원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시에 북한이 남한과 동일한 일인당 국민소득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남한이 지원해 주어야 할 큰 투자지원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남측 국민의 저항이 클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큰 투자지원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사이 일인당 국민소득의 조정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다면 통일에 대한 너무 안일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한 소득의 50 내지 80%를 주어진 소득 조정기간내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경제통합과정에 있어서 중간목표시점을 정하는 것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 완성시점이란 남북한 양지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동일해지는 시점을 말하며 경제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이 달성되는 시점을 말한다(이하에서 완성시점이라고 표기).

## 2. 단계의 구분

남북한 경제통합의 3단계는 위에서 정의한 통합과정에서 구분되는 4가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교류 및 협력단계, 경제지원단계, 균형 지역개발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교류 및 협력단계는 기준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통합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특정한 통합시점에서의 북한의 일인당 GNP의 감소 정도는 통합시점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을 반영하는 자본스톡의 감소(혹은 붕괴) 정도와 북한인구의 남한 유입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통합시점에서 북한의 자본스톡 감소와 인구이동에 따른 일인당 GNP의 감소는 통합시점까지의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둘째, 경제지원단계는 통합시점부터 중간목표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즉 통합시점부터 목표로 정한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는 단계로서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남측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을 돕는 동시에 중간목표시점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인당 GNP와 목표로 정한 남한 경제의 일인당 GNP의  $x\%$ 와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자본축적을 위해서 투자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재유형의 단계적 통합방안이 가장하고 있는 단계 및 북한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경제특구 설정단계 등은 넓게 말해 이 단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균형지역개발단계는 중간목표시점부터 완성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단계

를 균형지역개발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중간목표를 달성한 시점부터는 남북한의 문제가 한국가내에서 지역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경제적인 유인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다.

## III. 통합모형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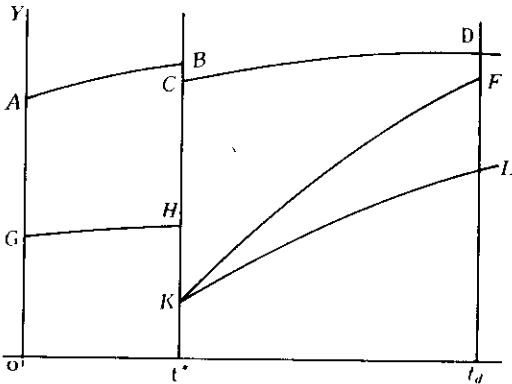
여기에서 정의되는 필요자본량은 다음과 같다. 통합시점을  $t^*$ 라고 할 때 남북한의 경제통합이후  $d$ 년의 구조조정 기간이 경과한 후,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일인당 국민소득의  $x\%$ 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량에서 통합이후 북한 자체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자본량을 차감한 부분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구조조정 기간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d$ 나 중간목표시점에서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chi$ 는 통합이전이나 이후 남북한 국민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지만,  $d$ 는 대체로 10년 내지 15년을 상정하며  $\chi$ 는  $d$ 년의 구조조정 기간이 지난 후의 남북한 문제가 지역간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이 필요자본량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성장모형을 이용하는데, 우선 아래의 「그림 1」을 통하여 모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에서 종축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내며 횡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0은 기준시점이며  $t^*$ 는 통합시점으로서 기준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 또한 10년 내지 15년 사이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t_d$ 는  $d$ 년의 구조조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간으로  $t_d - t^* + d$ 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는 사항은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그림 1> 통합모형의 개요



<통합전후 남한의 일인당 GNP 성장경로>

- AB: 통합전 남한의 일인당 GNP 경로
- BC: 통합시점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고려한 일인당 GNP의 변화
- CE: 통합후 남한의 일인당 GNP 경로
- $t_d F$ :  $t_d$ 시점에서 남한의 일인당 GNP의  $x\%$  수준

<통합전후 북한의 일인당 GNP 성장경로>

- GH: 통합전 북한의 일인당 GNP 경로
- HK: 통합시점에서 자본감소(산업구조 조정 반영)와 인구이동에 의한 일인당 GNP 감소
- KL: 통합후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

우 북한의 일인당 GNP 경로

- $t_d L$ :  $t_d$ 시점에서 북한의 일인당 GNP 수준
- $K_{NK}(L)$ :  $t_d$ 시점에서 북한의 자본스톡
- $K_{X.SK}(F)$ :  $t_d$ 시점에서 북한의 일인당 GNP가 남한의  $x\%$ 수준이 되기 위한 자본스톡

<필요자본량>

$$K_{RX}(t_d) = K_{X.SK}(F) - K_{NK}(L)$$

<남북한 경제통합의 3단계>

- [  $0 \sim t^*$  ] : 경제교류 및 협력단계
- [  $t^* \sim t_d$  ] : 경제지원단계
- [  $t_d \sim$  ] : 균형지역개발단계

필요자본량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체계로부터 유도된다.

$$L(t) = \beta P(t) \quad ①, \quad \dot{L}(t) = gL(t) \quad ②$$

$$\dot{K}(t) = \theta Y(t) - \delta K(t) \quad ③,$$

$$Y(t) = y[ K(t), L(t) ] \quad ④$$

식 ①은 총인구와 노동인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며, 식 ②는 노동인구의 변화를 나타낸다. 식 ③은 GNP중 일정한 부분이 투자되며 총투사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만큼 자본이 변화함을 나타내는 식이고 식 ④는 생산함수이다.

여기에서 생산함수의 1차동차성과 Harrod-neutrality를 가정하면 위의 방정식은 선형연립 미분방정식체계로 표현되며, 각각의 남북한 경제에 대하여  $L(t)$ ,  $P(t)$ ,  $K(t)$ ,  $Y(t)$ 의 시간경로가 도출된다. 이 시간경로로부터 기준시점에서의 남북한의 경제상황, 통합시점에서의 북한경제의 자본붕괴와 인구이동, 구조조정 기간, 목표료하는 북한의 일인당 GNP 그리고 통합을 전후한 남북한의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자본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이 유도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수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필요자본량의 추정이 가능하고, 다른 변수를 고정시키고 특정한 변수만을 변화시킴으로써 비교성태분석이 가능하다.

필요자본량이 구해지면 위에서 산출된 필요자본량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적 기간배분하는 경로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기간별 최적 투자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비용이란 투자지원액에 따른 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첫째,  $t$ 기의 투자지원액 그 자체<sup>1)</sup>, 둘째,  $t$ 기의 투자지원액에 따른 남한생산의 감소분과 북한생산의 증가분을 고려한 기회비용, 셋째, 국내재원으로만 조달이 불가능한 투자지원액의 통일국채 발행이나 해외차관 도입에 의한 조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  $t$ 기의 북한에 대한 남한의 투자지원액은 장기적으로 민족자본을 형성하고, 미래수익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경제학적 의미의 비용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지원액에 따른 미래수익 흐름의 정확한 양식 추정은 불가능하고 우선 남한경제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흔히 투자지원액 자체를 통일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실증분석은 통합이후 남북한 경제상황에 따른 필요자본량 추정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 IV. 실증분석

##### 1. 공통으로 쓰이는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후의 경제상황에 따른 필요자본량 추정의 예로서 통합시점이나 통합이전의 남북한 경제상황, 구조조정 기간, 통합시점에서의 북한경제의 자본붕괴나 북한인구의 남한이동 수준은 동일하게 놓은 상태에서 통합후 남북한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자본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논의의 중점을 두어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준시점은 1992년으로 하고 통합시점은 기준시점으로부터 3년 뒤, 즉 1995년으로 상정한다. 통합시점에서는 북한경제의 국영기업 사유화, 사유재산권의 재확립 그리고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30%의 자본스톡 감소를 가정하고, 통합시점에서의 북한인구의 남한이동은 노령인구를 중심으로한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10%를 가정한다. 1995년이 통합시점이고 2005년이 중간목표시점이 된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통합이후 남한경제의 고성장의 경우에는 6%의 성장율을, 중성장의 경우에는 5%, 저성장의 경우에는 4%의 성장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통합이후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고성장의 경우에는 8%의 성장율을, 중성장의 경우에는 7%, 저성장의 경

우에는 6%의 성장율을 가정한다. 우선 남북한 공히 통합이후 중간정도의 성장을 가정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1992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1995년 통합시점까지 남북한의 경제성장을 남한의 경우 5.2%, 북한의 경우 1.4% 정도를 가정할 때, 우선 기준시점에서의 남북한 경제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경제상황(1992년)

	$P_{i0}$	$L_{i0}$	$K_{i0}$	$Y_{i0}$
남한(s)	43,663,000	18,921,000	8,420억\$	2,945억\$
북한(n)	22,627,000	10,430,000	675억\$	211억\$

자료: 통일원.

주:  $i=s$  또는  $n$

기준시점에서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비교하여 볼 때 GNP를 기준으로 하면 남한이 북한의 14배, 일인당 GNP를 기준으로 하면 7.2배 정도 앞서 있다. 남한의  $L_{s0}$ 는 노동인구이며, 북한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이다<sup>2)</sup>. 남한의 자본스톡은 실제추계치이며, 북한의 경우 기준시점의 산출량 수준에 3.2배한 결과이다<sup>3)</sup>. 또한 성장율의 결정에는 남북한 공히 자본의 한계생산성, 총투자비율, 감가상각률, 인구성장율 등이 필요하다. 남한의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건설 및 장비투자에 대한 GNP 증가를 사용하였고, 총투자비율은 통계청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북한의 인민경제비에는 소비성 지출이 포함되는

항목이 있지만 대체로 투자로 보아도 무방하며<sup>4)</sup> 따라서 북한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인민경제비에 대한 GNP의 증가를 나타낸다. 북한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적을 경우에는 0.05에서 많을 경우에는 0.09까지의 수치를 가진다. 북한의 총투자비율은 GNP에 대한 인민경제비의 비중을 나타내며 북한의 경우 이 수치가 8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감가상각률은 남한의 경제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에 적용한 결과이며 북한의 경우는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다. 인구성장율은 통일원의 추계를 이용하였고, 제시된 수치는 5년 단위로 제시되는 예측치의 기간에 따른 가중평균치를 이용하였다.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가정하는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북한인구의 남한유입)은 고령인구를 중심으로한 이산가족의 재결합 등 정책적 목표에 따라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시점에서 북한인구의 남한유입은 통합시점까지의 북한 총인구의 10%를 가정한다. 이 10%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3을 차지

3) 본논의 분석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소득발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본스톡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식이 유도되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준시점에서 북한의 산출량 수준에 3.2배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남한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경우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3.2배한 것이다.

4) 북한예산에서 인민경제비는 생산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본건설자금, 원자재와 중간재를 생산유통하는데 소요되는 유동자금, 과학기술 발전사업비, 도시경영 사업비, 지방 사업비, 대외경제 사업비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자본을 증가시키는 투자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는 비투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경제활동인구에는 실업인구가 포함되어 북한의 경우 잠재된 실업이 은폐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북한의 경우 공식적으로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하며 나머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정하였다.

<표 3> 필요 자본량

%	50	60	70	80	90	100
일인당 GNP	5,060	6,071	7,083	8,095	9,107	10,119
필요자본량	3,581	4,682	5,784	6,886	7,984	9,089

주: 일인당 GNP 단위: 달러, 필요자본량 단위: 억 달러

## 2. 통합이후 남북한 경제상황에 따른 실증분석

### (1) 남북한 모두 중간적인 성장의 경우

위와 같은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하에 남북한 공히 통합후 중간정도의 성장을 이룩한다고 할 때, 10년간의 구조조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남북한 경제상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남북한 경제상황(2005년)

	$P_{iK}(t_d)$	$L_{iK}(t_d)$	$K_{iK}(t_d)$	$Y_{iK}(t_d)$	$y_{iK}(t_d)$
남한(s)	51,071,479	21,876,162	18,032억\$	5,168억\$	10,119\$
북한(n)	23,955,151	11,381,900	1,049억\$	332억\$	1,386\$

주:  $i = s$  또는  $n$

구조조정 기간 동안 남한의 경제는 연평균 5%, 북한경제는 순조로운 체제전환과 함께 연평균 7%의 성장율을 기록한다고 할 때, 중간목표시점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자본스톡은 562억 달러, 북한의 총자본스톡의 규모는 1,049억 달러이다. 그러나 통합시점에서의 자본스톡 붕괴와 인구이동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인당 GNP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7.3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남북한 경제의 경제력 격차를 일인당 GNP 기준으로 남한수준의 50 내지 100% 수준까지 줄이는데 필요한 자본량은 <표 3>과 같다.

두번째 행은 남한 소득수준의  $x\%$ 이며 세번째 행은 북한지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두번째 행과 같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스톡(필요자본량)이 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로 하는 남한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자본량은 3,581억 달러에서 많게는 9,089억 달러가 소요된다. 이 가운데 남북한 경제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정책목표(목표수준)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가내에서도 지역간 소득불균형 정도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일시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필요자본량 수준은 대체로 3,600억 달러에서 6,900억 달러까지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통합이후 남북한 경제상황에 따른 필요자본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성장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통합후의 남북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래에서는 남북한 모두 고성장이거나, 남북한 모두 저성장인 경우 그리고 통합후 북한의 경제상황에 따른 필요자본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한의 평균적인 성장에 대하여(7%) 북한의 고, 중, 저성장인 경우를 결합하여 필요자본량 수준을 비교하게 된다. 아래의 <표 4>는 남북한이 각각 고, 저성장을 기록하는 경우

중간목표시점에서의 경제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표 4> 남북한 경제상황(통합이후)

	경제상황	고성장	저성장
남 한	총인구	51,071,479	51,071,479
	노동인구	21,876,162	21,876,162
	자본스톡	18,530억 달러	16,290억 달러
	GNP	5,528억 달러	4,832억 달러
	일인당 GNP	10,824 달러	9,461 달러
북 한	총인구	23,955,151	23,955,151
	노동인구	11,381,900	11,381,900
	자본스톡	1,121억 달러	984억 달러
	GNP	353억 달러	312억 달러

(2) 남북한 모두 고성장인 경우

통합이후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서 남북한 경제가 통합이후 남한이 연평균 6%의 성장을 기록하고 북한이 연평균 8%의 성장을 한다고 가정할 때, 목표로 하는 남한경제의 수준에 따라 필요자본량은 적게는 3,674억 달러에서 많게는 9,311억 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남북한 모두 평균적인 성장율을 가정하는 경우보다 필요자본량의 절대규모면에서는 많은 수치이지만, 중간목표시점에서 남한의 GNP 수준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각 목표수준에서 남한의 GNP에 대한 비중은 줄어든다(<표 5> 참조).

<표 5> 고성장시 필요 자본량

%	50	60	70	80	90	100
일인당 GNP	5,412	6,494	7,577	8,659	9,742	10,824
필요자본량	3,674	4,801	5,929	7,056	8,184	9,311

주: 일인당 GNP 단위: 달러, 필요자본량 단위: 억 달러

(3) 남북한 모두 저성장인 경우

통합이후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이 순조롭지 못하여 성장율이 6% 정도에 머물고 남한경제 또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정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연평균 4% 정도의 성장에 머문다고 할 경우에는 각 목표수준에 있어 필요자본량의 절대규모면에서는 남북한 모두 평균적인 성장율을 기록하는 경우보다 적지만 중간목표시점에서의 남한의 GNP에 대한 필요자본량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저성장시 필요자본량

%	50	60	70	80	90	100
일인당 GNP	4,731	5,677	6,623	7,569	8,515	9,461
필요자본량	3,491	4,570	5,649	6,728	7,808	8,887

주: 일인당 GNP 단위: 달러, 필요자본량 단위: 억 달러

(4) 통합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에 따른 분석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합이후 남한의 평균적인 성장(5%)에 대하여 북한경제의 성장율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자본량은 절대적인 면에서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성장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 목표수준에서 필요자본량의 감소율은 증가한다. 이는 통합이후 북한경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과 고성장이 필요자본량의 절대적인 액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성장율이 증가함에 따라 남한경제의 부담도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북한의 성장율에 따른 필요자본량

%	50	60	70	80	90	100
일인당 GNP	5,060	6,071	7,083	8,095	9,107	10,119
북한(8%)	3,308	4,361	5,415	6,473	7,523	8,577
북한(7%)	3,581	4,632	5,784	6,836	7,984	9,089
북한(6%)	3,866	5,020	6,174	7,328	8,483	9,637

주: 일인당 GNP 단위: 달러, 북한 GNP 단위: 억 달러

위에서와 같은 실증분석은 또한 통합시점, 구조조정 기간, 통합전후의 남북한 경제상황 그리고 통합시점에서의 인구이동 규모나 자본소통의 감소 정도 등 관심사항에 따라 각각 상이한 외생변수의 조합에 의해 행해질 수 있음은 물론이며 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단지 통합이후의 남북한 경제상황에 따른 분석을 주로 한 것이다.

## V. 결론

본론에서 분석된 내용을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시점을 92년, 통합시점을 95년이라고 하고 10년의 구조조정 기간을 가정하였을 경우, 목표수준에 따라 3,581억 달러에서 9,089억 달러까지의 필요자본량이 산출되었다. 현실적으로 중간목표시점에서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남한 수준의 50 내지 80 % 수준으로 정한다고 할 때, 필요자본량은 대체로 3,600억 달러에서 6,9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재원의 조달범위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이후 남북한의 경제성장율을 달리 하면서 필요자본량을 추정한 결과, 통합이후

남북한이 고성장으로 조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자본량의 절대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고성장으로 조합되는 경우에는 남북한 모두 저성장으로 조합되는 경우보다 필요자본량의 절대적인 수준면에서는 많은 결과가 도출되지만 중간목표시점에서 필요자본량의 GNP에 대한 비중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째, 남한의 평균적인 성장에 대하여 북한의 고성장, 평균적인 성장 그리고 저성장을 가정하고 필요자본량을 추정해 본 결과 북한의 성장 정도에 따라 필요자본량의 절대규모가 감소하며, 또한 이와 같은 감소의 규모는 북한의 경제성장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이전이나 이후 체제전환시,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의 속도나 사유화 방법에 있어서 통합이후의 북한지역의 자체적인 고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자본량을 감소시키며 그만큼 남한경제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네째, 산출된 필요자본량의 최적 기간배분을 위해서는 해외자본 조달이나 통일국채 발행 등에 따른 비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수량적인 최적 기간배분 경로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재원만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필요자본량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의 재원조달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2]